

데스크시각

유권자들의 시간



임동욱 서울취재본부장·선임기자

4·15 총선이 100일도 남지 않게 되면서 사실상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유권자들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셈이다. 다당제로 시작한 20대 국회는 협치가 실종되면서 역대 최악의 국회였다는 평가다. 박근혜 정권의 붕괴를 부른 ‘촛불 혁명’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갈등과 대립으로 식물·동물 국회가 이어지면서 민심의 기저에 전혀 미치지 못했다.

‘내로남불’의 20대 국회

이에 따라 21대 총선은 유권자들의 냉엄한 ‘심판의 무대’가 될 전망이다. “이게 나라냐”며 촛불을 들었던 민심이 이제 “이게 정치냐”라며 분노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황은 만만치 않다. 여야 모두 심판의 대상인 반면 적절한 대안 세력이 없다는 점에서 민심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정치권의 전망도 엇갈린다. 일단 문재인 정부 중반기에 치러지는 총선이라는 점에서 ‘여당 심판론’이 우세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좀처럼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민생 경제와 개선되지 않는 각종 경제 지표, 정세 상태의 한반도 비핵화 문제, ‘조국 사태’ 및 청와대 선거 개

입 논란 등 여권에 대한 심판이 이뤄질 요건은 충분하다.

하지만 ‘정권 중간 평가’나 ‘여당 심판론’도 야당이 제 역할을 하고 있을 때에 제기된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오히려 ‘태극기 부대’와 함께 하는 등 퇴행적 모습마저 보이고 있다. 국민의당 또한 제3당으로 시작했으나 분열로 몰락한 상황이다. 이 같은 현실은 21대 총선에서 오히려 ‘야당 심판론’을 소환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여당인 민주당과 20%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으며, 소수 야당들의 지지율도 바닥인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제3지대 신당의 돌풍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기존 여야 기득권 정당들에 대한 민심의 반감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호남을 근간으로 하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이 이를 모색하고 있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지역과 진영을 넘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구심점과 역량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단순한 이합집산을 통한 ‘국민의당 시즌 2’로 민심의 지지를 얻기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정계 복귀를 선언한 안철수 전 의원을 주목하고 있지만 그간 보여 온 행보를 보면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다.

‘혁신 경쟁’ 이끌어 내야

결국 21대 총선을 관통할 정치적 화두는 ‘혁신’이 될 가능성이 크다. 20대 국회를 지켜봤던 민심의 저변에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위기의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를 떠나 어느 정당이 철저한 혁신을 통해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민심의 지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과감한 인적 쇄신과 새로운 인물 영입은 혁신 경쟁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보수 통합은 물론 제3지대 신당의 상공 여부도 과감하게 기득권을 버리고 기존 구도를 허무는 혁신적 접근이 핵심이다.

2020년 대한민국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엄중하다. 경제, 외교, 안보, 민생 등 그 어느 것도 쉽지 않다. 결국 정치가 위기의 시대를 극복하는 동력이 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진영·세대를 넘어 미래로 가야 한다. 이제 촛불 혁명을 이뤄냈던 유권자들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정치 혁신의 동력은 결국 적극적인 ‘참여’다. 정치를 혁신 경쟁의 무대로 이끌어야 한다. 이는 우리가 마주한 시대적 과제가기도 하다. /tuim@kwangju.co.kr

社說

15년 표류 어등산 개발 공론화로 해법 찾자

광주시가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5년 더 연장하며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기존 계획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또다시 헛바퀴만 도는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달 30일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 기간 만료일을 2019년 12월에서 2024년 12월로 연장하는 내용의 조성 계획을 변경 고시했다. 그러나 어등산 일원에 숙박·상가·공공편의·휴양문화 시설 등을 포함한 대단위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관광 시설 계획(토지 이용 계획)에는 변화가 없었다.

이 때문에 광주시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사업을 시작한 지난 2005년부터 15년간 허송세월했는데 앞으로 5년 또한 표류하는 것이냐는 걱정이다. 시는 그동안 삼봉건설, 금광기업, 모아종합건설, 호반건설, 서진건설 등과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상을 벌여 왔지만 결과는 한결같이 사업 포기나 협상 결렬이었다.

사업 표류 원인은 상가 시설 부지면적(2만4710㎡) 제한으로 사업성이 낮은 점이 꼽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광주시가 재추진 의지를 밝힌 것은 광주에 특급호텔과 대형 쇼핑시설 등 관광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광주시가 기존 사업 방식을 유지하려면 자본 조달 등 사업 능력이 뒷받침되는 대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수밖에 없다. 시가 직접 개발하거나 시와 민간이 공동 개발하는 방안 등도 검토돼 봐야 한다. 다만 어떤 경우가 됐든, 영세 상인 매출 감소와 지역 자본의 역외 유출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도시철도 2호선처럼 사업 내용과 방식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해법을 찾는 공론화를 추진하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하다.

‘애벌레에서 나비로’ 확실한 변화와 도약을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올 한 해 국정 목표를 국민에게 알리는 신년사를 발표했다. ‘확실한 변화’를 통한 ‘상생 도약’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더 자주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다짐도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내부적으로 더 통합적이고 협력적인 사회가 되어야만 계속 발전해 갈 수 있다”며 “극단주의는 배격하고 보수와 진보가 서로 손잡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백년 맞는 말이다.

집권 4년차에 접어든 문 대통령은 이번 신년사에서 경제를 비롯한 사회 안전과 환경, 한반도 평화와 외교 안보 등 국정 운영 전반에 걸친 구상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혁신과 포용, 공정과 평화를 바탕으로 ‘함께 잘 사는 나라’,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겠다”며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더 열심히 뛰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경제 각 분야에 대해 나아갈 방향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는 점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4차 산업시대를 선도할 혁신 강화, 소재·부품·장비산업 글로벌 기업화, 더 좋은 기업투자 환경 조성 등을 적시했다. ‘광주형 일자리’로 대표되는 지역상생 일자리 확대에 대한 언급도 빼놓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가장 아름다운 변화는 애벌레에서 나비로 탄생하는 힘겨운 탈피와 교양’일 것이라고 자만 2년 받은 그 새로운 변화를 위한 시기였음을 밝히고 나비로 ‘확실히 변화하자고 호소했다. 노·사라는 두 날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라는 두 날개, 보수와 진보라는 두 날개, 남과 북이라는 두 날개로 ‘상생 도약’하자고 주문한 것이다.

말만 놓고 보면 참으로 멋지고 번드르른 수사(修辭)이지만, 문제는 실천이며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의 신년사가 단지 ‘말의 성찬’이자 ‘희망 고문’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이다.

은폐칼럼

‘뉴 DJ’를 갈망하며

낮추어졌어도 김대중 후보의 당선이 어려웠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런 비난은 ‘비난을 위한 비난’에 불과했다.

호남인들이 DJ에게 열렬한 지지를 보낸 것은 그가 호남인이라는 단순한 이유 때문이 아니었다. 호남인이 영남 출신인 노무현 후보와 문재인 후보에 대해 보여준 높은 지지율이 이를 잘 말해 준다. 호남인이 DJ를 지지한 것은 DJ가 추구한 가치 즉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 지역 균형 발전 등이 호남인이 추구한 가치와 유사했기 때문이었다. DJ와 호남인들은 소위 ‘가치 동맹’을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와 국격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켰다.

작년 8월에 DJ 서거 10주년을 맞이했다. 당시는 한일간의 외교 갈등이 큰 현안으로 부각된 시점으로서 정치권과 언론은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상기시키며 DJ의 외교적 해안과 능력을 높게 평가했다. 심지어 보수 정권과 언론까지 DJ 칭찬 행렬에 가담했다. 지금 남북 관계가 어려운데,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DJ 같은 위대한 외교관, 위대한 민족 지도자가 필요하다. DJ처럼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명확한 철학과 비전, 진정성, 그리고

주변 국가들에 대한 설득력을 갖춘 지도자가 필요하다.

DJ는 국민의 정부 초대 내각 구성에서 큰 관심을 모은 통일부장관과 재정부장관, 금융감독위원장에 모두 자민련 출신 인사를 등용했다. 주변에서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많이 나왔다. 그러나 DJ는 보란 듯이 임기 동안 남북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켰고 IMF 위기를 조기에 극복했다. DJ가 임기 초반 주요 장관직에 자민련 출신 인사를 등용한 것은 국민 통합이 없다는 남북 관계도, IMF 위기 극복도 불가능하다는 현실적 판단에서였다. 자신이 명확한 원칙과 정책 능력을 지니고 있는 한 특정 장관의 정치적 성향은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그의 자신감이 반영된 결과 이었다. ‘서생적 문제 의식과 상incer 현실 감각’이라는 DJ 철학의 단면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과거나 현재나 우리 지역 사람들은 ‘뉴 DJ’의 출현을 갈망한다. 여기서 ‘뉴 DJ’란 DJ 같은 결출한 인물, DJ의 정치 철학을 계승할 사람, 전라도의 자긍심을 고양시켜줄 인물들을 말한다. 다행히 이 지역 출신인 이낙연 국무총리가 유력한 대선 후보 중 한 사람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그가 DJ의 권유로 정계에 입문한 점, 그가 내세운 ‘실용적 진보주의’가 DJ의 ‘서생적 문제 의식과 상incer 현실 감각’을 연상케 한다는 점, 다음 대통령은 외교와 남북 관계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할 것 같다는 언급 등 그의 언행 등에서 그가 진정으로 DJ를 ‘롤 모델’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어 반갑다.

금년은 선거의 해이다. 우리 지역에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는 사람은 많은데 반해 DJ를 내세우는 사람은 거의 없어 많이 아쉽다.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모두 우리 지역이 키운 인물이고 훌륭한 분들이지만, 그래도 수십 년 동안 모든 희생을 감수하면서 운명을 함께 했고 세계적 인물이 된 DJ와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물론 세월이 많이 지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대통령들과의 개별적 인연이 아니라 정신이다.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가치와 정책에 가장 충실히 임하는 정치인이 진정으로 ‘뉴 DJ’이다. 이번 총선에서 큰 비전과 꿈을 가진 인물, 정책적 유능함, 그리고 호남의 정체성에 어울릴 수 있는 ‘뉴 DJ’의 출현을 갈망해 본다.

기고

마지막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마치고



황인환 광주 윤리초등학교 학폭위 위원장

결하려고 하다 보니 학교에서는 학폭위 운영이 과중한 업무 중 하나였다. 이에 학폭위가 오히려 학생들 간의 자율적인 해결 노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와 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이 학폭위 과정에서 학부모들 싸움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었다.

학폭위는 어디까지나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직접적인 폭력이나 고의적인 따돌림에 대해서 심의하고 교육적 처연의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학교 폭력 예방법 개정안은 ‘학교 자체 해결제’를 도입해 2주 이상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 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 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반복 행위가 아닌 경우로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교적 경미한 학교 폭력으로 간주해 학폭위가 심의하지 않고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초중고에 다니는 학생을 둔 부모라면 언제든 학교 폭력이라는 문제를 접할 수 있고 피해자도 또는 가해자도 맞닥뜨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학교폭력 중에는 직접적인 폭력도 있지만 보다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학생들이 서로 어울리는 과정에서 누구와 더 친하고 덜 친한 감정 탓이다. 이를 부모님은 이를 ‘따돌림’으로 생각하고 학폭위를 열어 주기를 원한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집단 따돌림’의 정도에 이르고 학교 폭력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괴롭힘에 대한 인식 즉 역할 수행에 제약이 가한거나 인격적으로 무시 혹은 언어적, 신체적 가해 행위가 전제돼야 하는 것이다. 또 학생들 사이에서 친하고 덜 친한 사이에서 임계 되는 마음의 상처는 학폭위 심의 대상이라기 보다 학생들 스스로의 대화와 노력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

물론 학폭위가 열리게 되면 학폭위 위원들은 피해자와 가해자간 대화를 강조하여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지만 대부분 학폭위 출석은 당사자 학생이 아닌 부모

이기 때문에 정작 대화를 위한 노력보다는 자신의 아이를 변호하기 급급하고 부모끼리 감정이 서로 상하면서 학교와 학폭위 담당 선생님을 힘있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학폭위는 성인들의 폭력 사건과 구별하여 사법 기관과 법원을 통한 처벌보다 학교라는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교육적인 선도의 목적을 가지고 심의하는 기구다. 만약 가해자 피해자 모두 서로의 입장을 고집하여 평행선을 달리게 된다면 결국에 있어서는 아이들, 부모님 모두 어느 순간부터는 서로가 피해자가 되어 가고 있었다.

피해자라고 해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만을 고집하고, 가해자는 우리 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라는 식으로 부모가 내린 결론을 학폭위에서 얻고자 자신의 입장만을 고집한다면 이 과정에서 힘들어하는 것은 우리의 아이들이다. 만약 학교 폭력이 발생했다면 학폭위를 먼저 열어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여 대화를 통한 해결 노력을 멈추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다.

無等鼓

우리나라 선거 연령이 오는 제21대 총선에서부터 만 18세로 낮아졌다. 정확히는 2002년 4월16일 이전 출생자들이 투표권을 갖게 된다. 따라서 유권자로 새롭게 편입되는 만 18세 새내기들의 힘이 이번 총선에서부터 발휘될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4월말 기준 만 17세 인구는 53만 2295명이다. 이 가운데 광주·전남에서는 4만 3748명이 대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만 18세가 되면 부모의 법률상 부양 의무에서 제외되고 혼인도 가능하게 된다. 또한 운전면허 취득, 신용카드 발급, 8급 이하 공무원 임용, 그리고 군 입대

가 가능하다.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성인 대우를 받게 되는 셈이다. 그런데도 그동안 유독 참정권만 만 19세로 규정돼 선거에서 만큼은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1948년 제헌 헌법에서 선거 연령을 만 21세로 정한 이래 1960년 3차 개헌 때 만 20세로, 2005년 여야 합의를 통해 19세로 조정된 바 있다. 이후 선거절차만 되면 만 18세로 선거 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보수 정당의 끊임없는 반대로 무산되길 반복했다.

1997년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선거연령 18세’를 처음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으니 23년 만에 비로소 현실화된 셈이다. 이 공약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1940년대 가수 백난아가 불렀고 1992년 가수 한서경이 리메이크한 ‘낭랑 18세’라는 노래가 있다. 여기서 ‘낭랑(朗朗)은 밝고 명랑하다는 뜻이다. 그만큼 폭발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만 18세 새내기 유권자들이 이번 총선에서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정치권에서는 초미의관

심사이다. 이들도 기성세대만큼이나 정치에 관심이 많고 특히 교육과 문화 등 자신들과 밀접하게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는 더욱 관심이 많다. 이제 ‘낭랑 18세’들이 진정한 정치 참여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민주주의에 대한 균형 잡힌 선거 교육 등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들 젊은 유권자들이 구태로 물든 한국 정치를 바꿀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최권일·정치부 부장cki@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김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직구)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내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기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